

현안과 과제

‘성장이 우선’이지만 ‘복지와 함께’ 가야

- 2030 세대와 4050 세대의 심각한 복지의식 격차

< 요약 >

○ '성장이 우선'이지만 '복지와 함께' 가야, 세대간 의식격차 심각

- 성장과 복지 중에서 '성장이 우선'이라는 답변 (58.0%)이 많았지만, 세대차이가 뚜렷이 드러남
 - 성장과 복지 중 '성장이 우선'이라는 답변 (58.0%)이 과반을 넘어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이 많았지만, 2030세대는 '복지가 우선'이라는 응답이 많았고 40대 이상은 '성장이 우선'이라는 응답이 많아 세대 차이가 뚜렷이 드러남
- '성장과 복지 둘 다 중요하며 함께 갈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가능하다는 긍정적 의견이 77.0%에 달했음
 - '성장과 복지 둘 다 중요하며 함께 갈수 있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는 답 (77.0%)이 공감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견해(23.0%)보다 훨씬 많았음
- 성장과 복지의 '이분법'보다 '공존법'이 더 우세
 - '성장과 복지의 공존'에 호응한 비율(77.0%)이 '성장이 우선'이라는 응답(58.0%)보다 훨씬 더 많다는 점을 통해서, 국민들이 성장과 복지를 ~~이분법적으로~~ 나누어 생각하기보다 '성장과 복지의 균형'을 더 추구하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음

○ 일자리 복지: '新성장산업'과 '복지서비스업'의 일자리 창출에 높은 기대

-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가장 큰 산업은 환경 바이오 등 신성장산업 '(36.9%)'과 의료 보육 등 복지서비스업'(25.2%)으로 인식함
 - 다음으로 '자동차 등 전통제조업'(23.8%), 관광 체육 등 기타 서비스업 '(14.2%)'의 순으로 응답
 - 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 보다는 새로운 성장산업과 복지서비스업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음
 - 복지서비스업 중에서는 '영유아 보육'과 '노인 돌봄' 서비스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가장 클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음

○ 고용안전망 : '실업급여' 기간과 금액을 늘리는데 상당히 보수적

- 실업급여 지급 기간(최소 3개월~최대 8개월)에 대한 의견은 적당하다는 응답이 56.1%로 가장 많았음
 - 실업급여 지급 기간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'적당하다' 56.1%, '너무 길다' 25.3%, '너무 짧다' 18.6%의 순으로 나타남
 - 실업급여 최대기간(8개월)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일반인들은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알 수 있음

- 실업급여 지급 액수(최소 3만천백원~ 최대 4만원)에 대한 의견 역시 '적당하다'가 63.4%로 가장 많아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표명
 - 실업급여 지급 액수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'적당하다' 63.4%, '너무 많다' 6.3%, '너무 적다' 30.3%의 순으로 나타나, 실업급여 상한액 (환원율 높이는 방안)에 대해 3명 중 2명 이상(69.7%)이 반대 입장이라는 점을 알 수 있음
- **일자리 정책 : 일자리 정보 제공과 직업훈련에 대한 높은 기대감**
 - 일자리를 늘리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정책은 '일자리 정보 제공' (49.4%), '직업 훈련' (32.6%)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
 - 그밖에 '고용 유연화' 9.6%, '채용 보조금 지급' 8.4%의 순으로 나타나, 정규직 해고를 쉽도록 하는 고용 유연화 정책과 채용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에 대한 호응도가 예상보다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음
- **청년실업 해법으로서 '중소기업 육성'과 '고졸 채용'에 높은 점수**
 - 청년실업의 해법으로는 '중소기업 경쟁력 강화'(54.7%)와 '고졸 채용 확산'(33.3%)에 대한 호응도가 높았음
- **'근로시간 단축'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부정적 의견보다 더 많아**
 - '근로시간 단축'이 일자리를 늘리는데 '도움 된다'(56.5%)는 긍정적 의견이 많았음
 - 그러나, 부정적인 답변도 43.5%에 달하기 때문에,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음
- **평생 직업훈련의 강화 : '자영업 쏠림 현상'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**
 - '평생에 걸친 직업훈련을 내실화하고 강화하여 은퇴자와 실업자의 자영업 쏠림 현상을 막아야 한다'는 의견에 공감하는 답변이 70.8%로서 대단히 높게 나타남
- **시사점**
 - 첫째,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에 대한 높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 바이오 재생에너지 등 新성장산업의 육성과 복지서비스업 활성화에 주력해야
 - 둘째, 실업급여 기간과 금액에 대한 보수적 의견이 많음에 따라, 고용안전망 확충의 필요성 홍보와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함
 - 셋째, 일자리 정책 중에서 효과가 높은 '일자리 정보 제공', '직업훈련'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정부의 더 많은 관심과 예산 투자가 요구됨
 - 넷째, '고졸 채용'에 대한 호응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학력 차별 최소화, 직업교육 강화 등의 보완 대책이 필요함
 - 다섯째,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긍정적 답변이 많았지만, 반대 의견도 43.5%에 달하므로,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

1. 조사 개요

○ 개요

- 조사 기간 : 2012년 5월 16일 ~ 5월 23일(8일간)
- 조사 방식 : 전화 설문조사
- 조사 대상 : 전국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1,011명
- 오차 범위 : 95% 신뢰수준에서 ± 3.08%

○ 응답자 특성

구분	성별		연령별				직업별						
	남	여	20대	30대	40대	50대~	화이트 칼라	블루 칼라	자영업자	학생	주부	농림 어업	무직
명	507	504	216	257	258	280	410	104	150	94	183	7	63
%	50.1	49.9	21.4	25.4	25.5	27.7	40.6	10.3	14.8	9.3	18.1	0.7	6.2

구분	소득수준별						자산규모별						학력별			
	100만	200만	300만	400만	500만	500~	1억↓	1억~3억	3억~5억	5억~10억	10억~20억	20억↑	중졸	고졸	대졸	대학원 이상
명	76	202	255	166	94	191	335	324	142	87	24	18	74	268	614	52
%	7.7	20.5	25.9	16.9	9.6	19.4	36.0	34.8	15.3	9.4	2.6	1.9	7.3	26.6	60.9	5.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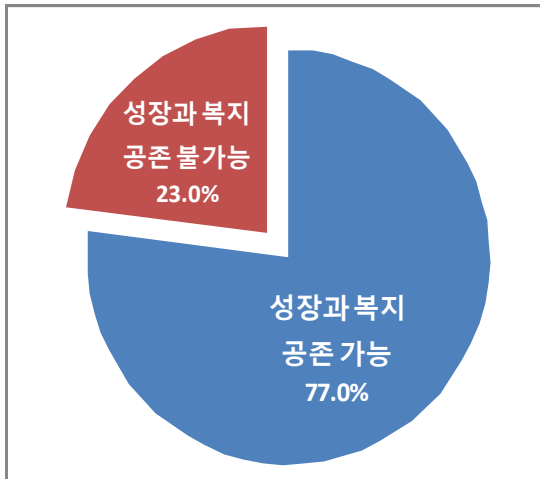
구분	결혼유무			지역별								지역특성별		
	기혼	미혼	기타	서울	인천 경기	충청	호남	부산 울산 경남	대구 경북	강원	제주	대도시	중소 도시	읍면 지역
명	673	317	20	207	277	103	106	165	109	33	11	471	375	165
%	66.6	31.4	2.0	20.5	27.4	10.2	10.5	16.3	10.8	3.3	1.1	46.6	37.1	16.3

2. '성장과 복지의 선순환' 관련 설문 조사 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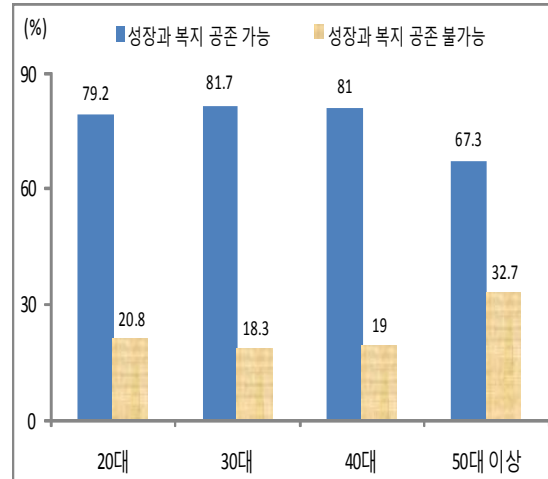
1)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

- '성장과 복지 둘 다 중요하며, 함께 갈 수 있다'는 의견에 대한 공감이 77.0%로 매우 높게 나타남
- '성장과 복지 둘 다 중요하며, 함께 갈 수 있다'는 의견에 대해 '가능하다고 본다'는 긍정적 의견이 77.0%, '가능하지 않다고 본다'는 부정적 의견이 23.0%로 나타남
- '성장과 복지의 공존'에 호응한 비율(77.0%)이 '성장이 우선'이라는 응답(58.0%)보다 많다는 점을 통해서, 우리 국민들이 '성장과 복지'를 성장이 먼저냐, 복지가 먼저냐 라는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생각하기보다는 '성장과 복지의 균형과 선순환'을 더 추구하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음

<성장과 복지 공존에 대한 견해>



<연령별 성장과 복지 공존에 관한 견해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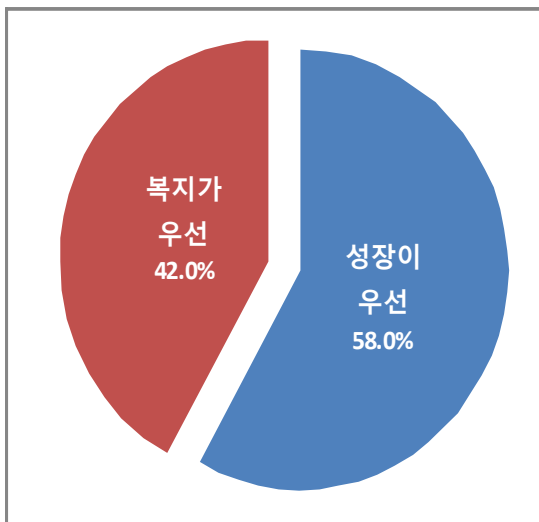


2) 성장과 복지의 우선 순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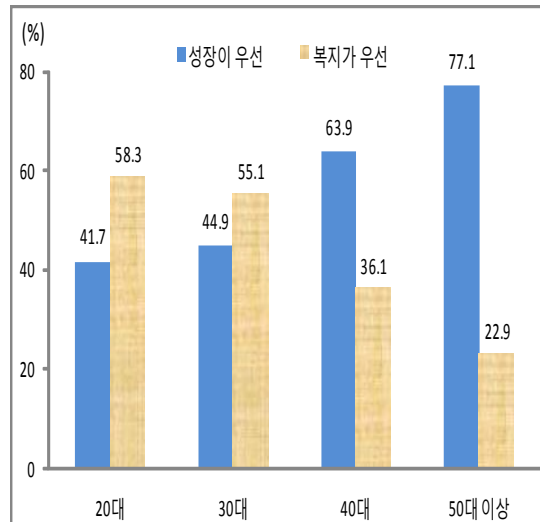
- 전체적으로 '성장이 우선'이라는 응답이 58.0%로서 '복지가 우선'이라는 응답보다 많았지만, 2030세대는 '복지가 우선'이라는 응답이 많았고 40대 이상은 '성장이 우선'이라는 응답이 많아 세대 차이가 뚜렷함

- '성장이 우선'이라는 비율이 58.0%로서 '복지가 우선'이라는 비율(42.0%)보다 많았지만, 세대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남
 - 성장과 복지 중에서 '성장이 우선'이라는 응답(58.0%)이 과반을 넘어, 복지국가 및 무상복지 논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'성장'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이 많다고 판단됨
 - 연령별로 보면, 2030세대는 '복지가 우선'이라는 답변이 더 많았고, 40대 이상은 '성장이 우선'이라는 답변이 많아서 세대별로 견해 차이가 뚜렷 (20대 41.7%, 30대 44.9%, 40대 63.9%, 50대 이상 77.1%)
 - 자산규모가 큰 부유층일수록 '성장이 우선'의 응답이 많았음
 - 학력별로 보면 고학력일수록 '성장이 우선'의 응답이 줄어들 (중졸 78.4%, 고졸 66.7%, 대졸 51.9%, 대학원졸 57.7%)
 - 직업별로 보면 화이트칼라, 학생의 경우 '복지가 우선'이라는 답변의 비중이 '성장이 우선'의 비중보다 더 많았음
 - 종합해보면, 2030세대의 젊은 학생, 화이트칼라, 대졸이상 고학력층에서 '복지가 우선'이라는 답변의 비중이 높았으며, 반대로 40대 이상, 블루칼라와 자영업자, 학력이 낮을수록, 자산이 많을수록 '성장이 우선'이라는 답변의 비중이 높았음

<성장 vs 복지 우선>



<연령별 성장 vs 복지 우선>



3)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한 산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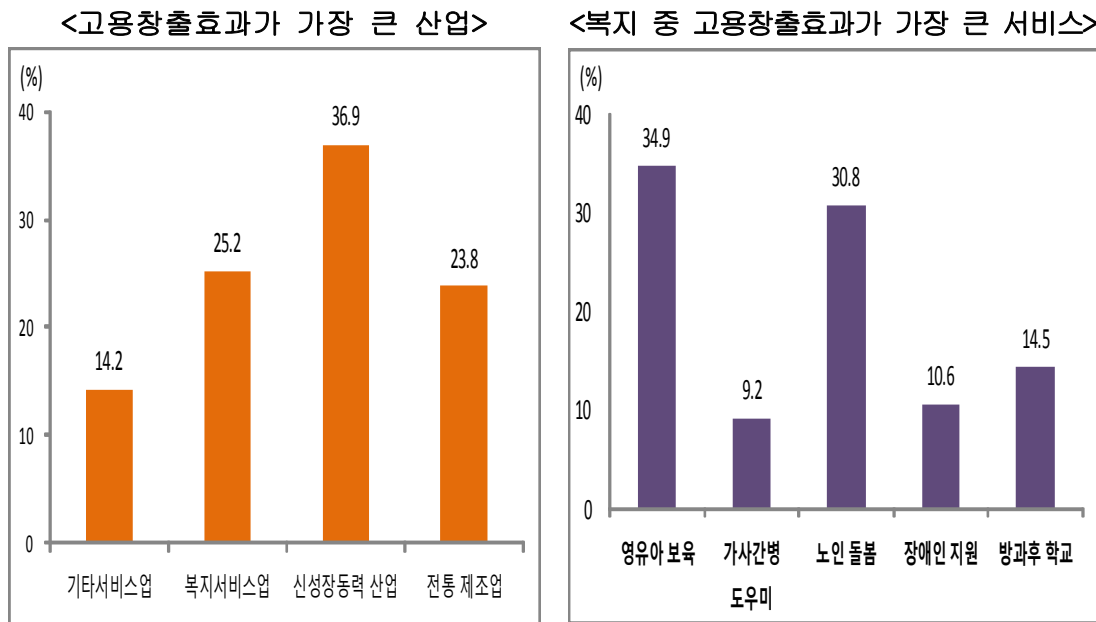
○ (산업과 일자리)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, 일자리 만들기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산업은 무엇인지 질문해 본 결과, '환경 바이오 대체에너지 등 신성장산업'이라는 응답이 36.9%로 가장 많았음

- 고용 창출효과가 높은 산업은 '환경 바이오 대체에너지 등 신성장산업'(36.9%), '건강 의료 보육 등 복지서비스업'(25.2%), '자동차 등 전통제조업'(23.8%), '관광 체육 등 기타 서비스업'(14.2%)의 순으로 응답
- 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 보다는 환경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성장산업과 건강 의료 보육 등 복지서비스업에서 일자리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음
- 환경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등 新성장산업에 대한 기대는 연령, 직업, 소득, 자산, 지역을 막론하고 일관되게 높은 수준임

○ (복지서비스업과 일자리)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위해, 복지서비스 가운데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가장 큰 서비스는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, 영유아 보육 34.9%, 노인 돌봄 30.8%로 높게 나타남

- 고용 창출효과가 큰 복지서비스업은 영유아 보육 34.9%, 노인 돌봄 30.8%, 방과 후 학교 14.5%, 장애인 지원 10.6%, 가사간병 도우미 9.2%의 순으로 나타남
- 영유아 보육과 노인 돌봄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서비스 수요가 높다는 것을 한번 더 확인할 수 있었음
- 기혼자의 경우 '영유아 보육'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고, 미혼자의 경우 '노인 돌봄'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음
- 연령별로 보면, 미혼자가 많은 20대는 '노인 돌봄'의 응답이 가장 높았고, 기혼자가 많은 30대 이상에서는 '영유아 보육'의 응답이 가장 높았음
- 결국, 30대 이상 기혼 전업주부는 '영유아 보육'을, '20대 미혼 학생'은 '노인 돌봄'을 선택하여,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드러낸 것으로 판단됨

- ‘보육’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은 보육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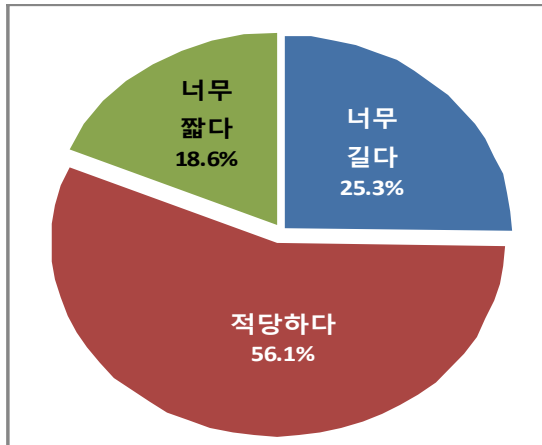


4) 실업급여 지급기간과 지급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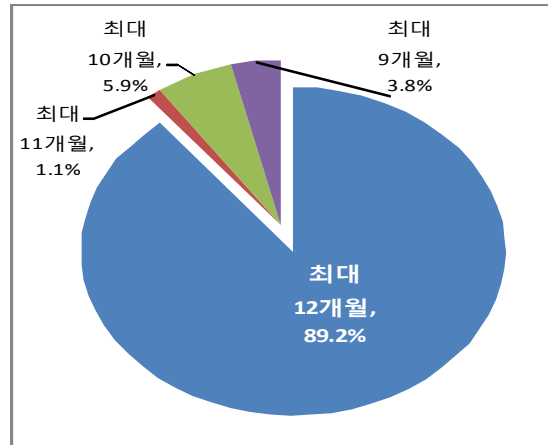
○ (지급기간) 현재의 실업급여 지급기간(최소 3개월에서 최대 8개월)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견해가 많았으며, 급여 지급기간을 더 늘리는 것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드러냄

- 실업급여 지급 기간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‘적당하다’ 56.1%, ‘너무 길다’ 25.3%, ‘너무 짧다’ 18.6%의 순으로 나타남
- 실업급여 최대 지급기간(8개월)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일반인들은 대체적으로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임을 알 수 있음
-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‘너무 짧다’고 응답한 그룹(18.6%, 185명)만을 대상으로 ‘어느 정도로 늘리는 것이 좋은가’를 물어본 결과, 가장 긴 ‘최대 12개월’(4개월 연장)을 선택한 비율이 89.2%로 가장 높았음

<실업 급여 기간에 대한 견해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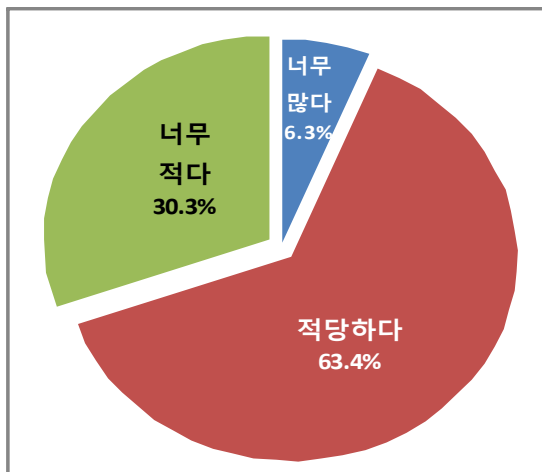
<'너무 짧다' 응답자의 지급기간 연장의견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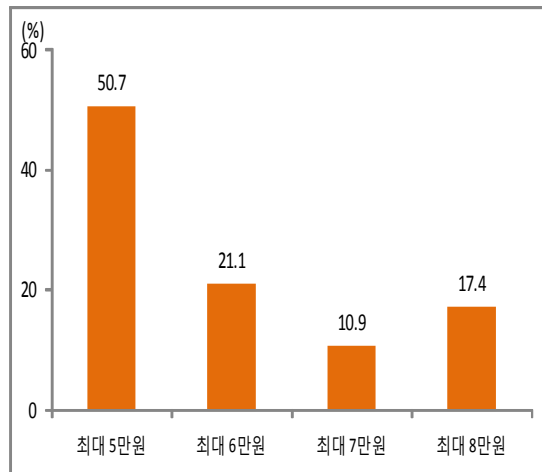
○ (지급액) 현재의 실업급여 지급액(최소31,000원에서 최대40,000원)에 대해서는 '적당하다'는 의견이 63.4%로 가장 많아, 급여 지급액을 늘리는 것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표시함

- 실업급여 지급 액수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'적당하다' 63.4%, '너무 많다' 6.3%, '너무 적다' 30.3%의 순으로 나타남
- 실업급여 상한액(4만원)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일반인들은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임을 알 수 있음
- 실업급여 지급액이 '너무 적다'고 응답한 그룹(30.3%)만을 대상으로 '얼마로 늘리는 것이 좋은가'를 물어본 결과, '최대 5만원'이 50.7%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'최대 6만원' 21.1%, '최대 8만원' 17.4%, '최대 7만원' 10.9%의 순으로 나타남

<실업 급여액에 대한 견해>



<'너무 적다' 응답자의 지급액 확대의견>



5) 평생 직업훈련의 필요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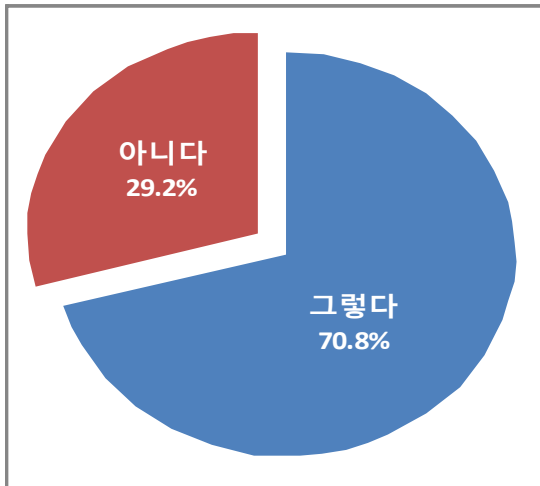
- 실업자와 은퇴자를 대상으로 청년에서 중년까지 평생에 걸친 직업훈련을 내실화하고 강화한다면 '자영업 쏠림 현상'의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에 70.8%가 공감한다고 응답함
 - 최근 '자영업의 과잉' 현상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해법으로서 '직업훈련을 강화하고 내실화해야 한다'는 의견에 대해 10명 중 7명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나, '직업훈련 정책'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판단됨
 - 연령이 올라갈수록 '평생 직업훈련'에 공감하는 정도가 커지고 있음
 - 서울, 부산, 울산과 같은 대도시일수록 직업훈련 수요가 상대적으로 작았으며, 읍면지역처럼 작은 도시일수록 평생 직업훈련에 대한 수요가 더 컸음

6)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정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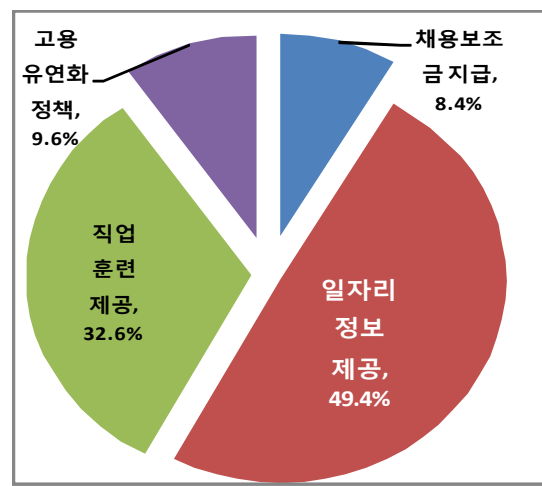
- 정부의 일자리 정책 가운데 가장 호응이 좋은 것은 '일자리 정보 제공'(49.4%)과 '직업훈련'(32.6%) 관련 정책이었음
 - 일자리 창출에 가장 도움이 되는 정책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'일자리 정보 제공'(49.4%)과 '직업훈련'(32.6%)이 전체 응답의 82%를 차지했으며, 그밖에 '고용 유연화 정책' 9.6%, '채용보조금 지급' 8.4%로 나타남
 -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하여 정규직 채용의 부담을 덜어주는 '고용 유연화 정책'과 1명 뽑을 때마다 '채용 보조금'을 지급하는 정책에 대한 호응도는 예상보다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음
 - '고용시장 유연화'에 대한 거부감은 현재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'경직성' 보다는 '불안정성'이 더 문제이며, 유연화를 추구할 단계가 아니라는 견해가 많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
 - '채용 보조금 지급'은 기업과 관련성이 높고 구직자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정책의 특성 때문에 호응이 낮다고 판단됨

- 반면, '일자리 정보 제공'과 '직업훈련'과 같은 '적극적 노동시장(active labor market) 정책'의 경우에는 구직자 개개인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호응이 좋게 나왔을 것이라고 판단됨

<평생 직업훈련이 자영업 실효 완화>



<신규 일자리 창출에 도움되는 정책>



7) 청년실업 정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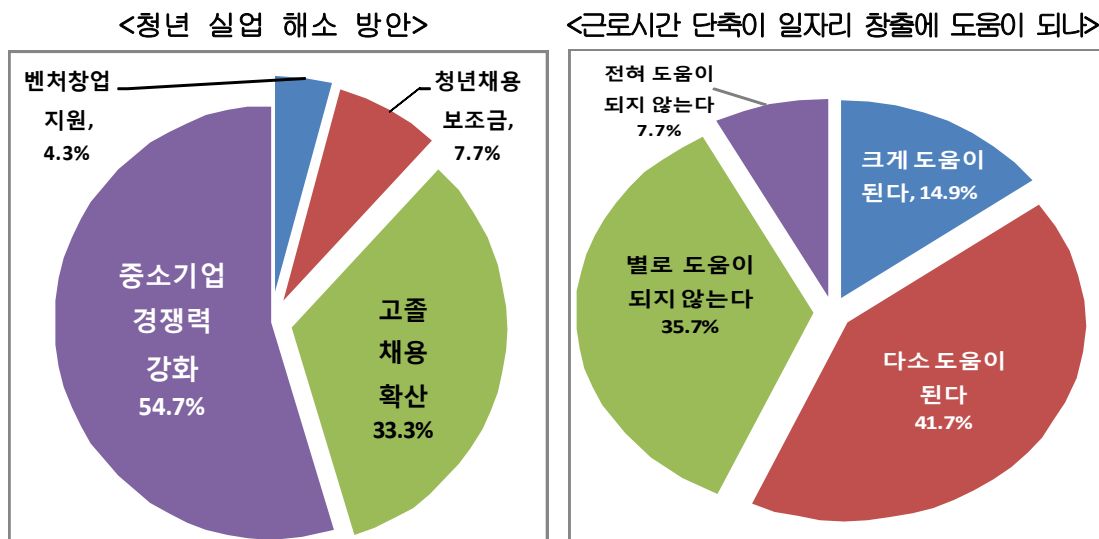
○ 청년실업의 해법으로는 '중소기업 경쟁력 강화'가 54.7%로 가장 높았으며, '고졸 채용 확산'도 33.3%로 높았음

- '중소기업 경쟁력 강화'와 '고졸 채용 확산'이라는 2가지 해법에 대한 응답을 합하면 88.0%에 달할 정도로 호응도가 좋음
-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'중소기업 경쟁력 강화'를 통한 청년 실업 해소를 선택한 응답자가 약 55.0%로서 가장 높게 나왔다고 판단되며,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'고졸 채용 확산'도 일반인들의 호응이 좋게 나옴
- 그밖에 '채용 보조금 지급'(7.7%)과 '벤처 창업 지원'(4.3%)에 대한 호응도는 예상보다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, '벤처 창업 지원'은 실질적으로 창업이 쉽지 않은 현실 등으로 인해 호응이 낮았다고 판단됨

8) 근로시간 정책

○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일자리 창출에 '도움 된다'는 의견이 56.5%로서 '도움 안된다'는 의견(43.5%)보다 높았음

- '근로시간 단축'이 일자리를 늘리는데 도움이 되나? 라는 질문에 대해 '된다'는 긍정적 답변이 56.5%로 많았지만, '도움이 안된다'는 부정적 의견도 43.5%나 존재함
- 43.5%에 달하는 부정적 의견을 감안한다면, '근로시간 단축'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음



3. 시사점

- 첫째,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환경 바이오 재생에너지 등 신성장산업의 육성과 복지서비스업의 활성화가 필요함
- 둘째, 실업급여 기간과 금액에 대한 보수적 의견이 많음에 따라, 고용안정망의 확충 필요성에 대한 홍보와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함
- 셋째, 일자리 정책 중에서 효과가 높은 '일자리 정보 제공', '직업훈련' 등 대안적 정책에 대한 정부의 더 많은 관심과 예산 투자가 요구됨
- 넷째, '고졸 채용'에 대한 호응이 높기 때문에 학력차별 최소화, 초·중등 학교에서의 직업교육 강화 등 보완 대책이 필요함
- 다섯째,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긍정적 답변이 부정적 의견보다 더 많았지만, 반대 의견도 43.5%에 달한다는 점을 정책 추진에 있어 감안해야 함

HRI

경제연구본부 김동열 수석연구위원 (2072-6213, dykim@hri.co.kr)
조호정 선임연구원 (2072-6217, chjss@hri.co.kr)

<참고> '성장과 복지의 선순환' 관련 설문지 (요약)

구분	질문	답변
성장과 복지 선순환	① 성장과 복지 둘 다 중요하고 함께 갈수 있다는 의견에 공감?	(1)가능하다고 본다 (2)가능하지 않다고 본다
	② 성장과 복지 중 무엇이 더 중요하고 우선되어야?	(1)성장 우선 (2)복지 우선
일자리와 복지	③ 다음 산업 중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가장 큰 산업은?	(1)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 (2)환경 바이오 등 신성장산업 (3)의료 보육 등 복지서비스업 (4)관광 등 기타 서비스업
	④ 복지서비스 중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가장 큰 서비스는?	(1)영유아 보육 (2)가사간병도우미 (3)노인돌봄 (4)장애인 지원 (5)방과후 학교
	⑤ 평생에 걸친 직업훈련의 내실화와 강화가 자영업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에 공감하나요?	(1)그렇다 (2)아니다
실업급여 확충	⑥ 실업급여 지급기간(최소3개월-최대8개월)에 대한 생각은?	(1)너무 길다 (2)적당하다 (3)너무 짧다
	⑥-1. 지급기간을 늘린다면 몇개월로	(1)최대9개월 (2)최대10개월 (3)최대11개월 (4)최대12개월
	⑦ 실업급여 지급액(최소3만천백원 최대4만원)에 대한 생각은?	(1)너무 많다 (2)적당하다 (3)너무 적다
	⑦-1. 지급액을 늘린다면 얼마로?	(1)최대5만원 (2)최대6만원 (3)최대7만원 (4)최대8만원
일자리 정책	⑧ 일자리 관련 정책 중에서 일자리 창출에 가장 도움되는 정책은?	(1)채용보조금 지급 (2)일자리 정보 제공 (3)직업훈련 (4)고용 유연화
	⑩ 청년실업 해소 방안은?	(1)청년벤처창업지원 (2)채용기업에 보조금 지급 (3)고졸채용 확산 (4)중소기업육성과 경쟁력 강화
	⑫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늘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?	(1)큰 도움 (2)다소 도움 (3)별로 도움안된다 (4)전혀 도움되지 않는다